

↑ 코스피 3449.62 (+42.31)	↓ 코스닥 851.84 (-0.85)
↓ 금리 (국고채 3년) 2.417 (-0.026)	↓ 환율 (원·달러) 1380.20 (-8.80) '16일



Economy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금융·발전 공기업 ‘칼바람’ 부나… 통폐합TF 출범 임박

정부,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중복 큰 기관중심 통합 검토
신보·기보·수은·무보 거론
한전 등 6곳도 중복투자 심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 뿌릴 씨앗조차 부족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 전성 위기 진단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재배치하 겠다”는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 주일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 합을 제대로 하라고 별도 지시했 다.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 고 공개했다.

말은 곧바로 리스트로 번졌 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 를 못 세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대통령 정책실은 “금 융 공기업도 많다. 기능 조정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1차 관문이 됐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 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공공기 관과 발전 자회사들이 통폐합 1 차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 통령비서실 주도의 TF 출범이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뉴욕거래소 기준 9월 인도분 금 선물이 3682달러를, 현물은 3695달러를 넘기는 등 사상 최고 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임박한 가운데, 기능 중복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시나리오가 물밑 검토되는 양상 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금융 분야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 편안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금 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소 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 술보증기금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 주택금융공

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 되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 중복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 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지원 공 백이나 서비스 약화 우려가 커 중소기업계와 수출기업의 반발 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보 통합시 중복 기능 을 해소하고 보증 효율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 보증 공백이나 지역 영업망 축소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

보 통합의 경우 정책금융 일원화 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출입 기업 지 원 지연이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 성이 나온다.

발전 자회사 구조조정 필요성 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대 상으로 신재생 전환 시대에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 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 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 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 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 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 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 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 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한미 관세협상 지연에 車 업계 경쟁력 위기

한국, 25% 관세 부담 지속
일본 15%로 가격경쟁 우위
현대기아 미국 전략 먹구름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길어지 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깊은 고 민에 빠졌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0조)를 투자하 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 으로 관세협상이 조율됐지만 최 종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단기적으 로 악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자 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이날부 터 27.5%에서 15%로 인하됐지 만 한국은 7월 30일 타결한 미국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부두

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는 했지 만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 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 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는 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했다. 여기에 관세 협상

장기화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 서 현지 전략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난 7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에서 25.0%의 관세를 부과받았 지만 27.5%를 부과받은 일본보 다 낮아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을 12.5%포인트 낮추면서 그 격 차는 10.5% 포인트로 역전됐다.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 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당장 토 요타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현지 시장싸움에서 상당한 어려 움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멕시코도 최근 수입품 에 대해 50% 관세 부가를 언급하 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는 국내 기 업들이 미국과 유럽 수출 물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기아가 미국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를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크게 확대될 수 있 다. 업계에서는 25% 관세 부과시 차량 1대당 800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조달 확 대 여력이 있는 완성차 업체와 달리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인 중 소·중견 부품사들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 부 교수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 차이는 매우 크다”며 “정부 차원 에서 완성차와 부품 업체가 관세 부담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추경 예 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어 “정부의 결정이 미뤄지 면서 당장 서명해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자동차 업계가 스스

로 관세 부담을 해결하라는건 생 태계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분 위기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사 건 등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우 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결국 현대차를 비롯한 삼성전자, LG, SK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 행 중인 우리 기업 전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생산시 설 확대를 준비 중인 한 국내 기 업 관계자는 “미국 관세 대응과 현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 문 제, 전문 인력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뒤엉키며 기존 투자 계획 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 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 자기 것인 줄 착각해선 안 돼”
- ▲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사법개혁 취지엔 공감” <사진 뉴시스>

- ▲與, 전복 찾아 “李대통령께서 각별한 애정… 상 실감 깊이 공감”
- ▲추미애 “조희대, 내란 재판 교란 한 통속… 물리 나라”

-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
- ▲국힘 “李대통령,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 속 기록 삭제 은폐 시도”